

# 노동조합, 주주총회에서 발언투쟁



14일 진행된 주주총회에서 노동조합 안창식 정책실장이 주가부양책에 대한 경영진의 의견을 묻고 있다

## 장기투자 방안, 주가부양책 등 의견개진

제21기 주주 총회가 본사 지하 대강당에서 14일 10시 주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러나 사측에서 동원한 사람들의 원안동의 발언과 박수가결로 인해 8개 의안이 '빈껍데기에 콩북아 먹듯' 진행돼 주주총회는 1 시간만에 끝마쳤다.

이날 이용경사장은 올해 경영목표를 매출액을 12조이상으로 책정하고 영업이익률을 18% 이상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자사주 매각 등을 벗어난 장기적인 주가부양대책 △LM개방, 시외전화통합 고지제 등 정부의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 △외국인 주주들 의식한 단기 수익극대화를 벗어나 장기적 관점의 기초투자 확대 방안 등을 지적했다. 이에 이용경사장은 경쟁사의 요즘까지 통합하여 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축소 지적에 대해 선택적인 집중투자

투자효과 극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주들은 최근의 주식이하 하락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용경 사장은 주주의 극대화를 위해 당기 순익의 50%를 주주이익을 실현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매년 주주에 대한 배당을 20%씩 늘리고 자사주 매각 등 주가 안정화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해 노동조합이 요구한 당기순이익의 직원들에 대한 성과분배와 사회환원적 측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주주만을 생각한다는 우려를 낳았다.

몇몇 주주는 KT사원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주주들은 △중간배당계획,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 폐지, △주가안정화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 '마로니에' 창립기념식

KT노동조합 본사지방본부 서울 통신망운용국지부(지부장 박성규)는 지난 2월 7일 서울통신망운용국회의실에서 여직원회 마로니에의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창립식에 참석한 김해관 수석부위원장과 김순근 본사지방본부 위원장은 여직원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노동조합도 여직원회와 같은 조합원들의 건전한 모임을 만들어가는데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 통신업, 필수공익사업장서 제외돼야 IT노협 성명서 발표 '노동3권' 보장 요구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의 노동쟁의는 조정신청에 따른 조정기간 15일, 중재회부에 따른 조정기간 15일에 대해 이유 없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중재결정이 내려지면 무조건 노동3권의 핵심이라 할 단체행동권을 금지함으로써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KT 또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파업권이 인정되지 않아 그 동안 불법파업을 양산해 왔다. 사용자측은 필수공익사업 조항을 이용해 무성하고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임으로서 실제 노사관계를 어렵히고, 악화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통신업종은 유·무선 등의 발전속도가 급속히 진행되는 데다, 여러 통신사업체의 설립으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묶어놓을 이유가 없다. 아직까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놓은 것은 민주적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직권중재 제도를 두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은 물론 노동조합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있다.

이에 KT노동조합, SK텔레콤노동조합 등 국내 5개 정보통신업체 노조로 구성된 한국IT산업노동조합협의회는 "참여정부는 통신업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제외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는 노동조합 존립 자체를 부정한다"며 "통신업종을 필수공익사업 지정에서 제외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정부를 자칭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노사관계 약소화의 고리를 끊고 신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의지를 가지고 그 동안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었던 통신업종 등에 대해 필수공익사업 제외와 직권중재 조항에 대해 이틀 시일 내에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연대소식

### 이라크 파병 반대

#### 불법침략전쟁에 대한 지원 이뤄지면 한반도 전쟁위기 억제력 상실할 것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가속화하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반전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 국내 노동, 시민, 종교단체들도 반전평화캠프 중동지역 파견, 촛불시위, 국회 동맹안 지지투쟁 등 반전평화운동에 적극적인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석유 이권확보와 친미정권 수립을 위한 부도덕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지 못하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4일 민주노총 김형탁 부위원장 등 3인의 '전쟁반대 대표단'을 요르단 암만에 파견했다. 대표단은 암만에서 반전시위에 참가하고 난민구호활동 및 한국대사관 앞 파병 반대 회견 등의 활동을 벌이고 귀국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파병안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사전 나선 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나선운동과 함께 대통령에 대한 탄핵운동과 총파업 등의 강력투쟁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의견서를 통해 "이라크 민간인의 무차별 희생을 강요하는 전쟁이 더 지속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반전·평화·인권의 원칙에 입각해 신중히 판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혀 반전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반전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은 국익과 실리를 위해 이라크전을



노동조합 정홍곤 부위원장을 비롯한 상설간부들이 파병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지지 지원하겠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UN결의도 무시한 미국의 불법 침략전쟁에 대한 지지이며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히고 "미국의 UN결의 없이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전쟁위기를 막을 근거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 동맹안 처리로 인해 파병이 이뤄진다면 한국은 미국의 용병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KT노동조합도 지난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이라크 파병 국회 동맹안 저지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고 전쟁반대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남북노동단체 5개항 합의서 채택

#### 올해 노동절 행사 평양에서 공동개최키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남순 위원장, 조선직업총동맹 염순길 위원장 등 남북 노동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11일부터 15일에 '2003년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 대표자회의'를 평양에서 열고 "남북노동자들의 교류, 협력, 연대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최근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타개하여 평화를 수호하고 통일을 앞당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6.15 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노동자 통일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평양개선문에서 기념 촬영중인 남북대표단

"2003년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 대표자회의"는 선언문에서 "조국의 통일은 남북 당국이 합의하고 온 세계가 공인한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실현되어야 한다"며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하고, △군사적 위협이나 전쟁이 아닌 평화적으로 실현하며 △은 민족의 대단결로 이

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과 북의 노동단체들은 선언문 내용의 세부 실천사항으로 5개항에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올해 5.1 노동절을 평양에서 남북공동으로 기념하고 <남북노동자 6.15km 통일마라톤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 가까운 시기 서울에서 <남북노동자 통일 추구대회> 개최 △6.15공동선언 발표 3돌을 맞아 올해 안으로 남북노동자들의 백두산 공동 등정 진행 △산별 및 지역별 교류·협력사업 추진 △위 합의사항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실무접촉 추진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대표자들은 만수대의사당을 방문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 위원장과 만나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남북노동자들의 그 동안의 노력과 성과들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나라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노동자들이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갈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 두산중공업 사태 타결

#### 교섭과 합의 주체 '금속노조'



고 배달호 열사 장례식이 지난 14일 창원에서 진행됐다

고 배달호 열사의 분신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진 두산중공업 사태가 63일 만에 타결됐다. 신중노동조합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손배·가압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손배·가압류로 피해를 받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합비의 40% 가압류는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노동조합의 노조원 사찰 감시 자료가 공개 등 노동부의 특별조사 결과 부당노동행위의 전모가 밝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두산중공업 인수과정의 500억원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자 다급해진 두산중공업 사측이 협상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손배·가압류에 대한 비판 여론과 '1천명 결사대 파견' '총파업' 등 노동계의 압박 또한 큰 작용을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해고자 전원 복직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사측은 후퇴를 거듭 5명복직에 합의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노조탄압에 대한 사장의 사과를 받아내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던 사측의 노사문화에 대한 업무성격을 명확히 했다. 특히 교섭과 합의의 주체가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 그동안 산별노조를 인정하지 않던 두산중공업에 산별노조의 기틀을 마련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개인 손배 가압류를 모두 취하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손배 가압류 문제 해결의 선례를 남겼으며 블랙리스트 등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 약속과 해고노동자 5명 우선복직 나머지 인원 추후 지속 협의, 파업기간 무결 임금손실분 50% 지급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두산중공업 노사관계를 정상화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편 고 배달호 열사의 장례는 지난 14일 창원 두산중공업에서 전국노동자장으로 치뤄졌다.

### 민주노총 "통일쌀 나누기"

미국은 최근 자국경제 침체로 인해 세계 석유시장 통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라크 전을 감행했다. 또한 세계경합을 자부하고 있는 미국은 그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라크 및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 전쟁위험을 일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라크 전 이후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포화가 일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반전평화의 실현과 지속적인 북녘동포의 식량난 해결을 통해 민족의 화합과 대단결을 이루고자 '60여만 전조합원 통일쌀 나누기 1천원 모금 운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KT노동조합에서도 통일쌀 나누기 행사에 적극 동참하고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의 지원과 연대를 통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고, 나아가 반전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 IT노협 수련회 21일 열려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양평에서 한국IT산업노동조합협의회 수련회가 개최됐다.

첫날 이원보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정세변화와 노동운동의 대응'이라는 강연을 듣고, 밤늦도록 분반토론이 이루어

졌다. 또한 'IT노협의 의의와 전망' 발제를 통해 연대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번 수련회에는 SKT노조, KTF노조, 엔터프라이즈 노조, KT노조, KT노조 간부 42명이 참석했다.